

민주당,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 도입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달 25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를 열고 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 1명을 포함하는 당규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8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남성 대신 여성 최고대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지난날 2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여성·노인·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인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 할당제 도입을 백지화했다가 사흘 뒤인 6일 다시 부활시켰고,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이들러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2명으로 당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새 지도부는 대표 1명, 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규 규정 신설...지도부 9인 체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당대표 지명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 45%, 권리당원 ARS 40%, 여론조사 15%(국민 10%+일반 당원 5%)로 의결했다. 신출직 최고위원 필위시 중앙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실시를 명문화했으며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 선출 대의원 규모도 1만135명으로 확정했다. 이 중 7590명은 25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7590명의 80%에 해당하는 6072명은 253개 선거구별 24명씩으로 배분했다. 나머지 20%인 1518명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에 비례해 40%를 배분하고 최근 실시한 전국 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60%를 배분하기로 했다.

나머지 264명은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1만명 초과분에 따라 1인씩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 조영익 법무법인

카이로스 대표변호사를 보임키로 의결했으며 당무위원회에서 임명을 결정했다.

또 조지강화특별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하고 지난 4일 최고위원회 의에서 의결한 148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위원회 인준을 압류했다.

당무위원회 권한 중 차기 당무위원회 개최 이전에 제3차 정기전국 대의원대회 준비 일정상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안전에 대해 의결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는 것도 의결했다. 권한 위임에 따라 중앙위원회 명부 승인의 건 및 지역위원회 승인 권한 및 지역대의원대회 승인은 향후 최고위원회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 등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차기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 제4차 중앙위원회를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박지원 "북미 양국 성급 文 안전운전 보여줘야"

"당 대표 출마 안해...남북관계·개혁에 전념할 것"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북미 고위급회담 성과가 없었다고 평하면서 "한국이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운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YTN 라디오 '김효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미국의 즉각적인 완전한 비핵화 시간표 요구와 북한의 종전선언과 대북경제 제재 해제 요구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포괄적인 탐-다운식 합의가 되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약파가 있는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후 24일 만에 만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협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어느 정도 시간을 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북한에 해준 건 뭐가 이게 감동을 받으면 고래 싸움에 등 터진다고 우리 한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때문에 저는 이 즈음에 문 대통령의 상당한 불밀지원·안전운전·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고도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면담하지 않은 것은 북측의 큰 실수"라며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으면 북측 반응이 어떻게 될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미 간에 서로 말싸움이 있었지만 미군 유해송환

동청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를 위해 관문점 회담과 실무 워킹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고 폼페이오가 이번에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고, 북한도 미국에게 줄 것이 있었는데, 우리의 선의의 인내심을 잘못 파악한 것 같다는 등의 말을 양국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파국은 아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북미 관계 외에 평화당 내 상황과 원내 상황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우선 박 의원은 평화당 차기 당 대표선거와 관련해 "저는 출마하지 않는다"며 "(출마자로) 몇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전당대회를 협의할 때 되고 등록이 시작되면 드러날 것"이라며 "저는 당 대표나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이미 발표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금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고 저희당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지 않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사람, 후배 정치인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병풍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당간담 남북관계, 개혁 이런 문제에 전념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의 부영 이모임에 관해 박 의원은 "부영이 모임은 과거 친박연대·친박 그런 것을 연상시킨다"며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그런 모임을 했다던, 그런 공개적인 파벌은 자기들 말대로 해산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산하겠다는 그 진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평화당, 당내 활동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에 당원 권리 부여

당헌상 특례규정 있어 투표권 등 합법적 권리 쥔

민주평화당은 9일 당내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에 대해 정당법상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원 권리를 전부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설명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에 보면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당원이 아닌 자가 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헌에 있는 당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고 당직을 부여할 수 있다"며 "장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현재 장정숙 의원은 평화당 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연구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평화당은 당 기여도에 따라 3명 의원에게 당원의 권리를 부여하기로 의결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은 내달 5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위원장과 최고위원 출마 등은 정당법 접촉 여부를 따져 선관위의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안철수, 주내 기자간담회...행보 밝힐듯

당내 인사들 두루 접촉... "정치권과 거리 두리" 조연 많아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3위 패배 이후 공식 입장을 자제해오던 안철수 전 의원이 주내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행보를 밝힌다.

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주 후반(지방선거) 소회와 앞으로의 일정, 계획을 밝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확실시되자 이를 인정한 뒤 향후 거취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고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구체적인 정치 행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이에 그의 향후 행보를 두고 갖가지 추측이 오갔다.

급기야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설까지 불거지자, 그간 침묵하던 안 전 의원 측도 명확히 입장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은 그간 당 소속 의원들과 원내 인사들, 당직자들을 두루

만나며 당내 상황과 향후 행보에 대한 조연들을 들어온 상황이다. 일단 안 전 의원 주변에선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라는 의견이 다수다.

다만 안 전 의원은 지난달 사무처 당직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성공이든 실패든 용기를 갖고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 "정계은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그가 정치권과 거리를 두더라도, 완전한 정계은퇴가 아니라 일정 기간의 정치적 공백기를 가진 뒤 추후 필요한 시기에 정계에 복귀하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 전 의원에게 필요한 공백기가) 최소 6개월이라고 본다"며 "대선과 지선을 치르면서 회화화된 이미지를 민회화하고 잊혀져 있다 보면 언젠가는 불려내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